

# 지적자유와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의 현장 인식과 과제\*

## A Field Perception and Agenda of Intellectual Freedom and Censorship Issues in Library

배 경 재 (Kyungjae Bae)\*\*

### 목 차

- |                                       |                      |
|---------------------------------------|----------------------|
| 1. 서론                                 | 4. 자료선택과 장서검열의 구분 기준 |
| 2. 도서관계 장서검열 문제 사례 분석                 | 5. 결론                |
| 3. 장서검열과 지적자유 이슈에 대한 도서관계 인식 조사 결과 분석 |                      |

### 초 록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도서관 장서검열 주제에 대한 도서관계의 현장 인식을 분석하여 갈등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과제를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장서검열 문제 사례를 정치적 이슈, 법률적 이슈, 선정성 이슈, 성범죄 이슈의 4가지 범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성범죄 관련 장서 열람 제한 조치가 장서검열이 아니라고 답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총 44.5%로 해당 이슈를 장서검열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한편 사서 대상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수서제한 또는 열람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도서관 윤리선언과의 괴리를 나타내어 향후 이와 같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task to adjust the conflict situation by categorizing and analyzing the recent cases of library book censorship and analyzing the field perception on the subject of library book censorship. Therefore, recent cases of book censorship were categorized into four categories: political, legal, sexuality, and sex crime. As a result of the study, 44.5% of the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 restriction on access to books related to sex crimes was not a library censorship or that it was difficult to judge. It showed the perception that this issue is not an issue that can be easily decided by book censorship. Meanwhile, as a result of a survey of librarians, there was an opinion that there was a need for restrictions on collecting or reading at the library site for various reasons, and eventually showed a gap from the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gainst all censorship, showing the need to make efforts to reconcile such conflicts in the future.

키워드: 지적자유, 검열, 장서개발, 자료선택, 금서

Intellectual Freedom, Censorship, Collection Development, Book Selection, Banned Books

\* 이 논문은 2021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jbae@dongduk.ac.kr / ISNI 0000 0004 6426 0952)

논문접수일자: 2022년 4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5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5월 1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2): 277-294,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2.277>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은 19세기 이후부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적자유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해오고 있다. 주요 국가의 도서관 관련 기관과 협회의 윤리선언에서는 지적자유 가치를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천명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도서관협회에서는 지적자유에 대해 모든 개인이 제약 없이 모든 관점의 정보를 찾고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가능한 모든 측면의 질문과 이유, 행동이 탐구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상의 표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 이 정의에서는 예상 가능한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측면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지적자유 개념이 다른 가치보다 매우 우선적인 원칙임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적자유 정의는 미국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미국도서관협회는 미국 도서관관리선언과 윤리강령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미합중국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원칙이며 그 제한은 예외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preferred position)'를 가지므로 법적으로 '완전한 보장'이 원칙적으로 요구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접근법'이 인정되고 있다(박주현, 2014).

우리나라 헌법 또한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제19조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포함), 제21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서관법은 제1조(목적)에서 도서관법이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 또한 이와 같은 지적자유 가치를 반영하여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인 우월적 지위를 가진 표현의 자유와 지적 자유 개념은 도서관의 핵심적인 윤리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장서 열람 제한 조치 또는 장서 수서 제한 조치 등의 이슈가 장서검열로 인식되면서 도서관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지적자유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인식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여러 사례 중 2021년 4월 5일 서울도서관에서 '비극의 탄생' 도서에 대해 내린 열람 제한 조치는 현시점에서 도서관의 열람 제한을 무조건적으로 검열로 인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의 적극적인 사회적이며 윤리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인지

에 대한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sup>1)</sup>

도서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서 열람 제한 조치와 수서 제한 조치가 장서검열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그 원인과 양상이 다양하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도서관 수서 담당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현재 갈등의 상황과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도서관 장서검열 주제에 대한 도서관계의 현장 인식을 분석하여 갈등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도서관 장서검열과 지적 자유의 주제는 국내에서 주로 2000년대 이후에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운영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정현태(2000)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20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각종의 도서관 활동과 관련한 지적자유 침해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적자유에 대한 이해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자행되는 외부적 간섭과 규제의 실체는 물론 내부적 무지와 타성에서 비롯하는 도서관 활동의 제약요인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희(2004)는 국내의 지적침해 사례를 지적자유 개념이 앞서 발달한 미국과 비교하기 위해서 금서조치로부터 지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각종 단체의 노력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로 판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금서로 인정되는 음란물의 헌법적 판정여부와 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대변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음란물로 인해 금서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성인물과 청소년용의 도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으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장치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서현(2017) 또한 금서 논란이 매우 활발한 미국도서관협회의 사례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미국도서관협회가 1982년 이래 실시해 오고 있는 ‘금서주간’ 활동의 핵심인 ‘도전받은 책’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전체 6,666권의 도서가 도전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전받은 책들의 71.3%는 아동용 혹은 10대 청소년 대상 도서였으며, 도전받은 이유로는 해당 도서가 ‘연령집단에 부적절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성적묘사가 지나침’, ‘종교적 관점을 반영함’, ‘반사회적 내용을 다룸’ 등의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장덕현(2011)은 장서문제를 중심으로 정보서비스 현장에서 관찰되는 지적자유에 대한 의의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1) 서울도서관은 책 『비극의 탄생』을 4월 5일 열람 금지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도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내린 조치다.

노력의 다양한 측면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즉,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개념, 공권력에 의한 정보독점과 정보통제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는 알 권리의 개념 등 제도적 장치와 도서관계의 노력을 고찰하였으며,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자유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관련 문건과 정책문서 등을 통해 세계적 흐름에서 지적자유 문제를 조망하고 우리 도서관계에 암시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도서관 내/외적으로도 연대와 실천을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확장시킴으로써 도서관이 검열에서 자유롭고 지식과 사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박혜선, 김기영(2016)은 초등학교도서관의 자료 선정 과정 중 나타나는 사서(교사)의 자기 검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자기 검열 행위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장서 개발 정책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 장서 관련 민원 요소에서 집단 간 유의한 자기 검열 차이를 발견하였고, 이용자 및 도서관 장서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에서 자기 검열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이용자 항의 대응 지침이 포함된 장서 개발 정책 마련, 학교도서관 소장 자료의 폐기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도서관계의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실제적 연구들과 더불어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

접근 자유와 도서관인의 윤리성을 '도서관 중립성'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그 양상을 분석한 연구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김선호(2020)는 도서관 이용자의 조건없는 정보접근 자유와 이 과정에서 도서관인의 개입 금지를 옹호하고 있는 학자들의 중립성 주장과 도서관 이용자의 무조건적인 정보접근의 자유를 반대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하여, 지적 자유의 완성을 이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후자는 전자의 의견이 오히려 사회 안전과 윤리 및 도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공직의 일종인 도서관직은 이런 문제의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구의 공공도서관들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백인이 지배하는 남성 사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나 소수자의 견해는 종종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소수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는 노력마저도 도서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기존 주류 세력에 동화 또는 순응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인이 만약에 이러한 중립성의 아이디어를 고집한다면, 본질적으로 도서관직의 허구성을 인정하게 되어 지배세력의 패러다임을 당연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김선호(2020)는 도서관이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중립성을 도서관의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철학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할 것을 제안하여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자료선택과 검열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새로이 필요함을 지지해주고 있다.

## 2. 도서관계 장서검열 문제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장서검열 문제 사례를 정치적 이슈, 법률적 이슈, 선정성 이슈, 성범죄 이슈의 4가지 범주로 유형화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이슈들이 도서관의 검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업무 절차에 의한 수서 또는 열람제한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최근 도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제한 조치를 유형별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실무 사서들의 인식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2.1 정치적 이슈

장서검열과 관련한 정치적 이슈는 민주주의가 성숙하였다고 평가하는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 A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정치적 장서검열 사례가 그것이다. A시의 특정 도서 구매 및 이용 제한 관련 평생교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A시 정보공개, 2018)에 따르면, 2017년 3월~4월 기간 동안 前 평생교육원장 A는 같은 해 5월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강조되자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중립 의무 차원에서 특정 도서의 구매 및 이용을 제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3월 24일 〇〇관장에게 유선으로 도서관별 정치 관련 도서목록을 작성토록 지시하고 취합토록 한 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총 73권의 도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구입금지

43권, 이용제한 30권). 아울러, 특정 도서에 대하여 원장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도서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A시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본인(前 평생교육원장 A)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특정 도서를 선정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구매금지 또는 이용제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시민에 대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 및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前 평생교육원장 A에게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제도개선) 도서관 자료선정심의회에 외부위원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A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내부공익제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공익제보 시 책임을 면책 또는 감경토록 하였다.

2020년 11월 6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7개 광역시도 공공도서관을 전수조사해서, 이용자가 희망도서로 신청했으나 ‘비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서들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중에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과 함께 <김지은입니다>도 포함되어 있었다(오마이뉴스 2020). 세 곳의 공공도서관에서는 <김지은입니다>에 대해서 비치를 거부했는데, 서울 A도서관에서는 ‘특수목적도서: 정치적/영리적/종교적’이라는 이유로, 서울 B도서관에서는 ‘영리, 정치적 신청자료’라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울산 C 도서관은 ‘광고성 희망도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가 비치 거부 사유였다.

이와 같은 사실이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후 해당 도서관을 대상으로 언론사의

취재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도서관들은 모두 '금서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공통적으로 국내 다른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어서 '상호 대차' 시스템을 통해서 빌릴 수 있고, 이미 구입했거나 신청이 들어오면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 2.2 법률적 이슈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률적인 이유로 도서관 장서에서 특정 장서검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2020년 7월 BBC 월드뉴스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새로운 보안법에 따라 홍콩의 공공도서관에서 친민주주의 인물이 저술한 책들이 보안법을 위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최소 9권의 책을 사용할 수 없거나 '검토 중'으로 표시되었으며, 여기에는 민주주의 활동가 조슈아 왕(Joshua Wong)과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타나 찬(Tanya Chan) 의원이 저술 또는 공동 저술한 책이 포함되었다. 공공 도서관을 관장하는 홍콩레저문화사무처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일부 서적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BBC, 2020).

## 2.3 선정성 이슈

도서의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도서관 수서에서 제외되는 일은 역사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서제한 조치 중의 하나이다. 선정적인 도서를 검열로 인식할 것인가는 논쟁적인 문제일 수 있으나, 다수의 도서관은 장서

개발정책상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정적인 자료의 경우 수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성문화된 근거를 갖고 자료선택 과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합리적 절차에 의한 수서 배제는 검열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검열의 문제는 정상적인 수서 절차 이후 배가된 상태에서 이용자의 민원 등에 의해 선정성 이슈가 제기되고 열람 제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 성관계와 출산을 설명한 서적이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동성간의 사랑을 비롯한 여러 사랑의 모습을 설명한 서적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열람 제한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서울시 B구청 산하 구립도서관 9곳은 여성가족부가 초등학생 성교육 교재로 선정한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7종을 2020년 8월 28일 모두 대출 금지하였다. 서울시 C 평생학습관도 해당 시기에 민원이 많았다는 이유로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등 5종의 대출을 금지했다.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은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자기긍정, 다양성과 공존을 지향하는 어린이책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22).

## 2.4 성범죄 관련 이슈

성범죄와 관련한 이슈로 인해 일부 도서들이 도서관에서 열람제한 조치되는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가 검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2020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쓴 책 〈김지은입니다〉가 일부 공공도서관에 비치가 거부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가 있으며(오마이뉴스, 2020), 2021년에는 서울도서관의 〈비극의 탄생〉 열람 제한 조치가 도서관계의 이슈가 되었다. 서울도서관은 2021년 4월 5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소속기관인 입장에서, 직장 내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직장 특수상황을 감안해 비극의 탄생을 열람 제한 조치했다. 이 조치에 대해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서울도서관에 바란다' 게시판에 해당 도서의 열람 제한 조치를 반대하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 접수되자, 2021년 4월 12일 서울도서관은 열람 제한 조치의 근거가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7조(열람)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서울도서관에서 열람 제한 조치를 취한 사유는 서울도서관이 피해자와 같은 소속기관으로서, 해당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행위가 동료 직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덧붙여 서울도서관이 특정 단체와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도서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또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적자유를 침해할 만한 결정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또한 고지하였다(서울도서관, 2021).

저자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성범죄자의 책은 도서관에서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 것인가? 특히 해당 저서가 아동문학 범주에 있으며, 작가가 아동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해 도서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도서관계에서 그동안 논의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2021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고, 도서관계에서는 처음으로 아동 성추행

작가의 책을 열람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로 유명한 '서연이와' 시리즈를 쓴 한예찬 작가가 2016년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11살 아이를 2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예찬 작가의 책을 펴낸 출판사는 1심 선고 이후 한씨의 모든 책을 절판하고 서점에서 회수하여 서점들은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 씨가 사실오인으로 주장한 4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구속상태였던 한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되게 된다. 한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JTBC 뉴스, 2021).

성북구립도서관은 이 사건 관련 대처방안에 대해 사서 회의를 진행하고, 한예찬 작가가 참여한 모든 책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조치는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며, 개별 사건에 대한 특수한 기준으로서 아동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며 대상 도서 또한 어린이들이 주로 읽는 책이기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기로 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조치사항으로 한예찬씨와 관련된 모든 책을 자료실에서 서고로 이동하며,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 사건에 있어 논란을 회피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지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의 도서 이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여 예외적인 경우의 열람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성북구립도서관, 2021).



〈그림 1〉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한예찬씨 도서 열람제한 공지사항(2021년 2월 17일)

### 3. 장서검열과 지적자유 이슈에 대한 도서관계 인식 조사 결과 분석

#### 3.1 성범죄 이슈의 장서 열람제한에 대한 인식 조사

성범죄 관련 이슈로 한예찬씨 도서 열람 제한 사안이 발생한 뒤, 성북구에 소재한 D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12일 관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0명의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개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한예찬씨 도서 열람 제한 사례에 대해 경과를 충분히 설명한 뒤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해당 재학생들이 성북구립도서관이 위치한 성

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이용자 집단이기도 하며, 지적자유와 장서검열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학습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피설문자이기 때문이다.

3.1.1 자료열람제한 조치에 대한 지지 여부  
첫 번째 질문으로 성북구립도서관의 한예찬씨 관련 자료열람 제한 조치 지지 여부와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올바른 조치라고 응답한 피설문자는 72.2%, 올바른 조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피설문자는 27.8%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올바른 조치로 생각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연대(2차 피해 예방)한다는 답변(53건)과 대체 가능한 어린이책이 충분하다는 성북구립도서관의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43건)이 가장 높았다(〈표 2〉 참조).



〈표 1〉 한예찬씨 관련 자료열람 제한 조치 지지 여부

| 구분              | 응답건수 | 비율     |
|-----------------|------|--------|
|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함    | 65   | 72.2%  |
| 올바른 조치로 생각하지 않음 | 25   | 27.8%  |
| 합계              | 90   | 100.0% |

〈표 2〉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는 이유(중복 선택)

| 구분                                 | 응답건수 | 비율     |
|------------------------------------|------|--------|
|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연대(2차 피해 예방)         | 53   | 32.1%  |
| 대체 가능한 어린이책이 충분함                   | 43   | 26.1%  |
| 특수한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              | 32   | 19.4%  |
| 지적자유 원칙 보호보다는 성범죄자 열람금지에 대한 실익이 우선 | 31   | 18.8%  |
| 기타                                 | 6    | 3.6%   |
| 합계                                 | 165  | 100.0% |

〈표 3〉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중복 선택)

| 구분                                    | 응답건수 | 비율     |
|---------------------------------------|------|--------|
| 지적자유 원칙 위배                            | 18   | 32.7%  |
| 검열에 해당                                | 13   | 23.6%  |
| 이용자 의견 수렴 미흡                          | 8    | 14.5%  |
| 법적, 윤리적 문제의 가능성 (표현의 자유, 시민의 알 권리 침해) | 13   | 23.6%  |
| 기타                                    | 3    | 5.5%   |
| 합계                                    | 55   | 100.0% |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적자유 원칙 위배(18건), 검열에 해당(13건), 법적·윤리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을 것(13건)의 순서로 응답하였다(〈표 3〉 참조).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아래와 같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동의 책 열람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열람 제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응답자 A) “도서관에서 자료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아동의 책 열람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동은 어른의 미완성단계가 아니다. 대화와 설명을 통해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중략) 열람을 제한할 것보다는 한예찬 사건에 대한 공지를 통해 아이가 주체적으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옳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응답자 B) “열람제한 기준이 모호함. 재판 결과 무죄가 되면 열람제한 조치를 풀 것인지, 이후 전수조사하여 같은 경우의 다른 책들도 열람제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

### 3.1.2 자료열람제한 조치가 장서검열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인식

한예찬씨 관련 자료열람 제한 조치가 장서검열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6%로 장서검열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16.7%)보다 높았지만,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도 27.8%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설문 직전에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정의한 모든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지적자유’의 개념과 함께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2019)에서의 검열 반대 조항<sup>2)</sup>을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44.4%의 응답자가 본 이슈에 대해 검열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은 성범죄로 인한 자료열람 제한 조치의 예외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성범죄’ 관련 이슈로 인해 2차 피해가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서관의 장서검열 행위로 정의할 경우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도서관계 윤리선언에 동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은 27.8%에 불과하며, 동의하지 않거나(38.9%),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30.0%)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의견이 도서관계의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겠으나, 도서관계에서 장서검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표 5> 참조).

<표 4> 한예찬씨 관련 자료열람 제한 조치의 장서검열 여부 인식

| 구분            | 응답건수 | 비율     |
|---------------|------|--------|
| 장서검열에 해당함     | 50   | 55.6%  |
| 장서검열에 해당하지 않음 | 15   | 16.7%  |
| 판단하기 어려움      | 25   | 27.7%  |
| 합계            | 90   | 100.0% |

<표 5> ‘성범죄’ 관련 이슈 등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도서관계 윤리선언 동의 여부

| 구분       | 응답건수 | 비율     |
|----------|------|--------|
| 동의함      | 25   | 27.8%  |
| 동의하지 않음  | 35   | 38.9%  |
| 판단하기 어려움 | 27   | 30.0%  |
| 기타       | 3    | 3.3%   |
| 합계       | 90   | 100.0% |

2)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 ‘2.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 3.2 현장 사서의 장서 열람제한에 대한 인식 조사

본 연구자는 2021년에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으로 '지적자유 원칙과 장서열람 제한의 갈등'을 주제로 두 차례 발제를 진행한 뒤, 강연에 참석 한 사서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정치적 이슈, 선정성 이슈, 성범죄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사서협의회 출범 기념 도서관현장포럼(2021. 7. 23.)과 2021년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지부 워크숍(2021. 12. 15.)에서 해당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73명의 사서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 3.2.1 각 이슈가 장서검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치적 이슈, 선정성 이슈, 성범죄 이슈가 각 도서관 장서 검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정치적 이슈와 선정성 이슈는 검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79.5%와 76.7%로 나타나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범죄 이슈와 관련해서는 60.3%의 응답자가 검열로 인식하며, 39.7%의 응답자는 검열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성범죄 관련 이슈가 검열 행위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예찬씨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장서검열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55.6%)와도 유사성을 보여준다(〈표 6〉 참조).

#### 3.2.2 도서관 현장의 수서제한 및 열람제한 조치 필요성

위의 각 이슈들이 '장서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수서제한 또는 열람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57.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2.3%에 불과하여 대다수 사서는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수서제한 또는 열람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표 7〉 참조).

도서관에서 수서제한 및 열람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개방형 설문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표 8〉과 같이 답변하였다. 실제로 도서관 현장에서 민원으로 인해 수서제한 및 열람제한이 필요한 때도 있다는 응답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서할 경우 장서의 유용성보다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우려가 있을 경우', '장서의 내용에 역사적, 과학적 사실의 오류'(거짓정보)가 있는 경우, 아동 및 어린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학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이념적 분쟁의 여지

〈표 6〉 '성범죄' 관련 이슈 등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도서관계 윤리선언 동의 여부

| 구분          | 정치적 이슈      | 선정성 이슈      | 성범죄 이슈      |
|-------------|-------------|-------------|-------------|
| 검열로 인식      | 58 (79.5%)  | 56 (76.7%)  | 44 (60.3%)  |
| 검열이 아니라고 인식 | 11 (15.1%)  | 14 (19.2%)  | 20 (27.4%)  |
| 판단하기 어려움    | 4 (5.5%)    | 3 (4.4%)    | 9 (12.3%)   |
| 합계          | 73 (100.0%) | 73 (100.0%) | 73 (100.0%) |

〈표 7〉 도서관 현장의 수서제한 및 열람제한 조치 필요성 여부

| 구분       | 응답건수 | 비율     |
|----------|------|--------|
| 필요함      | 42   | 57.5%  |
| 필요하지 않음  | 9    | 12.3%  |
| 판단하기 어려움 | 22   | 30.1%  |
| 합계       | 73   | 100.0% |

〈표 8〉 도서관에서 수서제한 및 열람제한이 필요한 경우

| 답변 내용   | 응답건수 |
|---|------|
| 민원 발생 및 민원 해결을 위해서 모기관 지시 또는 자료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 9    |
| 수서할 경우 장서의 유용성보다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우려가 있을 경우       | 3    |
| 장서의 내용에 역사적, 과학적 사실의 오류(거짓정보)가 있는 경우                | 3    |
| 아동 및 어린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학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 3    |
|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이념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도서                 | 3    |
| 선정적이거나 성범죄 이슈가 있는 도서                                | 2    |
| 도서의 내용 관련 피해자가 있어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
| 지역사회의 문화적 허용범위를 넘어선 경우                              | 1    |

가 있는 도서'의 경우가 각 3건 응답으로 뒤를 이었다.

도서관 현장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장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며, 특히 도서관 이용자 민원에 의해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 3.2.3 사서의 '자료선택' 업무와 '장서검열' 구분 기준

사서의 전문성이 반영된 '자료선택' 업무와 검열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개방형 설문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표 9〉와 같이 답변하였다. 도서관 수서담당자는 업무적인 절차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일부 도서를 수서에서 제외하게

〈표 9〉 사서의 '자료선택' 업무와 '장서검열' 구분 기준

| 답변 내용                                   | 응답건수 |
|---|------|
| 도서관 외부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때 '장서검열'             | 6    |
| 사실정보를 사서가 판단하는 경우(가짜 정보 필터링) '자료선택'     | 5    |
| 사서의 고정관념 및 개인적 가치관이 반영될 경우 '장서검열'       | 4    |
| 다수 이용자 관점이 반영된 기준에 따른 경우 '자료선택'(사회적 합의) | 4    |
| 시대 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반영할 경우 '장서검열'   | 3    |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경우 '자료선택'         | 2    |
| 명확한 규정 및 근거에 의한 업무일 때 '자료선택'            | 2    |
| 모기관, 운영주체에서 사서 전문성에 대해 인정할 때 '자료선택'이 가능 | 1    |
| 장기간의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경우 '자료선택'            | 1    |

되는데, 그것이 '장서검열'이 아닌 전문적인 '자료선택' 업무로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응답자는 도서관 외부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때 '장서검열'이라는 답변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사실정보를 사서가 판단하는 경우(가짜 정보 필터링) '자료선택'(5건), 사서의 고정관념 및 개인적 가치관이 반영될 경우 '장서검열'(4건), 다수 이용자 관점이 반영된 기준에 따른 경우 '자료선택' (4건)으로 응답하였다.

#### 4. 자료선택과 장서검열의 구분 기준

위에서 살펴본 도서관 사서직원들의 인식 조사 결과, 현장 사서들은 어떤 경우에 사서의 전문성이 반영된 '자료선택' 업무로 반영될 것이며, 또 어떤 경우에 '장서검열' 행위로서 배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적자유'의 개념 정의 및 한국도서관협회, 미국도서관협회, 세계도서관협회연맹 등 도서관 관련 단체의 사서 윤리선언에서는 사실상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검열'로 인식되는 행위가 도서관 유관단체의 '검열'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특히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윤리적·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도서관 현장에서 배척해야 할 실제적 '검열' 행위로 인

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서관계의 고민과 대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담론은 사실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지속하여 온 도서관계의 이슈였다. Asheim (1953)은 1953년 도서관 장서개발의 두 가지 주요 측면인 수서와 검열에 대한 해석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이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되었다. Asheim(1953)에 따르면 도서관 사서는 선택자(Selector)와 검열자(Censor)로서 아래와 같은 차이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선택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가능한 많은 자료를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서의 자유를 증진, 논쟁을 자극하고 혁신을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자료선택'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선택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판단(도서관의 내부 기준, 책의 내부 내용)' 할 것을 제시하였다. 검열자는 독자(이용자)에 대해 이성적인 지성인으로서 기대되는 반응을 예상하기보다는 비이성적인 사람이 읽었을 경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독자의 읽을 권리를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허위정보가 여러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문제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Moreillon(2020)은 검열과 자료선택의 구분 기준을 잘못된 정보를 가려내기 위한 일련의 결정과 연관 지어 제시하였다. Moreillon(2020)은 검열을 '자료 선택 시 해당 자료가 단지 논쟁적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고, 자료선택은 '자료에 허위정보, 고정관념, 허위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표 10〉 Asheim(1953)의 선택자와 검열자의 구분 기준

| 구분           | 선택자(Selector)  | 검열자(Censor)                                 |
|--------------|--|---|
| 관점           | • 선택자의 접근방식은 긍정적                                     | • 검열자의 접근방식은 부정적                            |
| 자세           | • 책을 보관할 이유를 찾음                                      | • 책을 거부할 이유를 찾음                             |
| 목적           | • 사소한 반론을 넘어설 가치·강점·미덕을 찾고자 함                        | • 반대할만한 특징·약점·오해의 가능성을 찾고자 함                |
| 독자에게 예상되는 영향 | • 작품의 내용에 대해 이성적인 지성인의 반응이 어떻게 예상                    | • 작품의 내용에 대해 약자, 비이성적인 사람에 대한 결과를 우려        |
| 판단 기준        | • 내부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판단(도서관의 내부 기준, 책의 내부 내용)            | • 외부 기준에 의해서 판단(저자의 배경정보, 과거 이력, 외부 영향과 압력) |
| 결과           | • 가능한 많은 것을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서의 자유를 증진, 논쟁을 자극하고 혁신을 도입 | • 독자의 읽을 권리를 억제하고, 고정관념을 영구화                |

###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도서관 장서 검열 문제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도서관 장서검열 주제에 대한 도서관계의 현장 인식을 분석하여 갈등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과제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장서검열 문제 사례를 정치적 이슈, 법률적 이슈, 선정성 이슈, 성범죄 이슈의 4가지 범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성범죄 이슈의 장서 열람제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예찬씨 관련 자료열람 제한 조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열람 제한 조치가 장서검열이 아니라고 답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총 44.5%로 해당 이슈를 장서검열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이슈로 인해 2차 피해가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서관의 장서검열 행위로 정의할 경우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도서관계 윤리선언에 동의하는지를 조사한 결

과, 동의한다는 의견은 27.8%에 불과하여, 도서관계에서 성범죄에 관련된 수서 및 열람 제한 조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현장 사서에게 정치적 이슈, 선정성 이슈, 성범죄 이슈가 도서관 장서 검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정치적 이슈와 선정성 이슈는 검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79.5%와 76.7%로 나타나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성범죄 이슈와 관련해서는 39.7%의 응답자가 검열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성범죄 관련 이슈가 검열 행위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수서제한 또는 열람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결국 도서관계의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윤리선언과의 괴리를 나타낸다. 향후 도서관에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료선택' 업무가 '장서검열'로 잘못 오해되지 않고, 도서관계 또한 불합리한 '장서검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는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논의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수서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도서관계의 인식을 공유하고 공통된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계 스스로가 배제가 아닌 선정의 과정으로서 수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수서 업무 기준 및 매뉴얼을 성문화하여 작성하고 모든 수서업무에 흔들림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서 스스로도 수서 과정에 더욱 엄격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선택 또는 열람제한이 스스로의 부정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로 스스로의 내용분석에 의한 수서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자료선택 과정의 사서직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도서관계 및 사서단체, 문헌정보학계가 함께 수서 업무에 대한 사서직의 전문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서직의 자료선택에 대한 대외적인 전문성 인식이 낮을 경우, 수서 행위가 도서관 외부의 정치적 행위에 도구화될 우려가 있으며,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료선택 고유의 업무가 침해될 위험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거짓뉴스와 허위정보를 필터

링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전달자로서의 사서 역할을 강화하여 사서직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서의 자료선택 업무 전문성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법상 사서직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는 사서의 자격요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기능과 권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장서관발(자료선택, 수서), 정보서비스 제공, 기타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 자격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기본조건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조례에서 사서직의 기능과 권한, 수서의 독립성 보장 및 수서 업무의 객관적 절차, 관련 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도서관 내부 규정(운영관리규정, 장서관발규정 등)에서 수서업무에 대해 매뉴얼화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지적자유와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 상황을 도서관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이후 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이행해가기 위한 보다 다양한 연구와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선호 (2020). 도서관직의 정치적 중립성: 무위와 비평. 대한정치학회보, 28(3), 1-22.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21139>
- [2] 박정훈 (2020.11.25.). '김지은입니다'가 공공도서관에서 거부당한 까닭. 오마이뉴스,

-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60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60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3] 박주현 (2014). 인터넷 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 [EPUB].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4] 박혜선, 김기영 (2016). 초등학교도서관의 자료 선정에서 자기 검열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3), 239-262. <https://doi.org/10.3743/KOSIM.2016.33.3.239>
- [5] 서울도서관 (2021.04.12.). 비극의 탄생(손병관 저) 열람 관련 시민 의견에 대한 서울도서관 답변. 출처: [https://lib.seoul.go.kr/bbs/content/1\\_50835](https://lib.seoul.go.kr/bbs/content/1_50835)
- [6] 성북구립도서관 (2021.02.17.). 성북구립도서관은 한예찬씨가 참여한 모든 책의 열람을 제한합니다. 출처: <https://www.sblib.seoul.kr/library/20001/bbsArticleDetail.do?bbsArticleIdx=209239>
- [7] 여성가족부 [발행년불명].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 출처: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15.do](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15.do)
- [8] 이명희 (2004).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노력과 금서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1), 193-21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38350>
- [9] 이서현 (2017). 미국도서관협회의 '금서주간(Banned Books Week)' PR활동 연구: '도전받은 책(Challenged Books)'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3(4), 187-230.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6114832>
- [10] 장덕현 (2011). 장서개발에 있어서 지적자유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165-182.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539915](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539915)
- [11] 전광준 (2020.09.12.). "선정적·동성에 편향적"?...도서관 금서가 된 '나다움 어린이책. 한겨레.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864.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864.html)
- [12] 정현태 (2000).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243-264. <http://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030360542142.page>
- [1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7, May 29). Intellectual Freedom and Censorship Q & 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censorship/faq#ifpoint1>
- [14] Asheim, Lester (1953). Not Censorship But Selection. *Wilson Library Bulletin*, 28 (September 1953), 63-67.
- [15] A시 (2018.12.31.). 「평생교육원 특정감사」 결과 공개. 출처: <https://www.anyang.go.kr/main/selectBbsNttView.do?key=219&bbsNo=44&nttNo=13570&searchCtgy=&searchKrwd=&pageIndex=5&integrDeptCode=>



- [16] BBC. (2020). Hong Kong Security Law: Pro-Democracy Books Pulled from Libraries. (2020, July 5). BBC, Available: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3296810>
- [17] JTBC. (2021). 아동성추행 혐의 동화작가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2021.05.26.). 출처: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075](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075)
- [18] Moreillon, (2020). Judi, Censorship versus Selection and Alternatives to American Dirt. (2020, February 24). Available: <http://www.school librarian leadership.com/2020/02/24/censorship-versus-selection-and-alternatives-to-american-dirt/>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eon-Ho (2020). Librarianship's political neutrality: inaction and critique.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3), 1-22.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21139>
- [2] Park, Jeong-hoon (2020.11.25.). The reason why 'I am Ji-eun Kim' were rejected by the public library. Ohmynews, Availabl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60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60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3] Park, Juhyeon (2014). Problem of Agenda in Internet Journalism. Seoul: Communicationbooks.
- [4] Park, Hyeseon & Kim, Giyeong (2016).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elf-censorship in selection in elementary schoo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239-262. <https://doi.org/10.3743/KOSIM.2016.33.3.239>
- [5] Seoul Metropolitan Library (2021. 04. 12.). Seoul Metropolitan Library's response to citizens' opinions on reading The birth of a tragedy(written by Son, Byeonggwon). Available: [https://lib.seoul.go.kr/bbs/content/1\\_50835](https://lib.seoul.go.kr/bbs/content/1_50835)
- [6] Seongbuk Public Library (2021.02.17.). Seongbuk Public Library restricts access to all books that Ye-chan Han participated in. Available: <https://www.splib.seoul.kr/library/20001/bbsArticleDetail.do?bbsArticleIdx=209239>
- [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d.]. Children's book education and culture project that seeks out the self. Available: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15.do](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15.do)
- [8] Lee, Myeong-Hee (2004). Libraries' efforts to preserve intellectual freedom and baned books.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5(1), 193-21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38350>
- [9] Lee, Seohyeon (2017). A study on PR activities of banned books week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focusing on challenged books, *Studies of Korean Science*, 43(4), 187-230.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6114832>
- [10] Chang, Durk Hyun (2011). Intellectual freedom issues in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165-182.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539915](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539915)
- [11] Jeon, Gwangjun (2020.09.12.). "Sensational, homosexual bias"?...'Nadaum Children's Books' Became Library Banned. Hankyoreh, Available: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864.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864.html)
- [12] Jung, Hyun-Tae (2000). A study on the intellectual freedom in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243-264.  
<http://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030360542142.page>
- [15] A City (2018.12.31.). 'Specific audit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Revealing the results. Available:  
<https://www.anyang.go.kr/main/selectBbsNttView.do?key=219&bbsNo=44&nttNo=13570&searchCtgr=&searchKrwd=&pageIndex=5&integrDeptCode=>
- [17] Child molestation charges, fairy tale writer's second trial, suspended. (2021. 05. 26.). JTBC, Available: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075](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075)